

『현대유럽철학연구』 제60집, pp.245~277.

(舊 한국하이데거학회/한국해석학회 통합 학회지)

DOI

20세기 초 국민경제적 상상과 유교윤리* :민족경제담론의 계보학적 탐색

김윤희(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한글요약】

오늘날 국민경제학의 상상은 (신)고전경제학에서 자본주의를 국가 내 부로 사유할 수 있는 지식을 마련하고, 역사학과에서 지역 또는 국가의 특수성과 사회윤리가 부가됨으로써 온전히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국민경제에 상상이 등장하고 확산했던 과정을 고찰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유교윤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주제어】 국민경제, 민족, 유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학지광, 동아일보

1. 들어가는 글

“국민경제학은 노동자가 한 마리의 말처럼 노동에 필요한 것을 획득하여 노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제시한다. 국민경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NRF-2018S1A6A3A01045347).

체학은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를 생각하지 않으며, 노동자를 인간으로 고찰하지 않는다. 국민경제학은 노동자를 인간으로 고찰하는 일을 형사법정, 의사, 종교, 통계표, 정치, 거지 단속 경찰에게 떠넘긴다.”¹⁾

국민경제학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인민의 부와 국가의 부가 선순환의 관계임을 설명하면서 상상의 지식토대를 마련했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은 자본이 한 국가 안에서 운용된다면-“각 개인이 최선을 다해 자기 자본을 본국 노동의 유지에 사용하고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노동을 이끈다면”- 자본을 공공의 이익으로 이끈다는 것이다.²⁾ 유럽 중상주의의 경제학이 국가의 부, 왕실의 부의 축적을 위해 국가 내 재화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중심에 두고 사유했던 것과 달리 아담 스미스는 자유로운 개인의 경제활동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조정된다고 하여 경제영역을 국가의 관리와 통제에서 상대적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상상했다.

자본주의 경제의 일반법칙으로 제시된 그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고전경제학에 계승되었고, 신고전경제학은 경제 분석의 대상을 자본, 노동, 토지에서 시장으로 이전시켰다. 소위 “한계효용”에 의한 가격 결정과 이를 통한 시장의 균형이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다. 이들은 마르크스의 자본 분석에 반대하고, 경제를 공동체 내부에 존재하는 희소 자원에 대한 최적의 분배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 해석했다. 고전경제학이나 신고전경제학은 한 국가 내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생산과 분배를 어떻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는지를 설명하고자 했다. 경제에 대한 일반법칙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들의 설명으로 인해 경제는 국가

1) K. 마르크스, 『경제학-철학 수고』, 김태경 옮김, 이론과 실천, 1987, 18.

2) 노동생산물이 최대의 가치를 갖도록 그 노동을 이끈 것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이다. 이 경우 그는, 다른 많은 경우에서처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에 이끌려서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3, 552).

권력 또는 정치와는 상대적 독립성을 가진,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반면 경제의 ‘일반법칙’을 거부했던 독일의 역사학파는 경제를 다른 국가의 그것과 구별하여 온전히 국가의 틀 안에서 사유할 것을 주장했다. 독일역사학과 경제학은 보편적이고 타당한 경제학을 추구했던 고전경제학을 비판하고, 역사적으로 형성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제학을 주장했다. 영국보다 자본주의 발전이 늦은 독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식으로서의 역사학과 경제학은 독일의 생산과 교환, 소비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고, 독일국민의 생활 실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나아가 ‘사회윤리’를 통해 자본가와 노동자의 협조, 국가의 적극적인 사회정책실시 등을 주장했다.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윤리의 관계에 대한 이러한 사유는 (신)고전경제학파는 달리 경제영역에 대한 국가 또는 사회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국민경제에 대한 상상은 (신)고전경제학에서 자본주의를 국가 내부의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영역이란 지적 토대를 마련하고, 역사학파에서 지역 또는 국가의 특수성과 사회윤리가 부가됨으로써 온전히 등장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국민경제적 상상이 어떻게 등장했을까? 국가의 경계 안에서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자율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념, 개인의 경제활동이 국가의 부를 형성하고,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관념은 어떠한 모습으로 등장했을까? 그리고 개인의 경제활동과 사회윤리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을까? 이 글에서는 한국에서 국민경제에 상상이 등장하고 확산했던 과정을 고찰한다. 나아가 이 과정에서 유교 윤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³⁾

3) 이 글은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룬 줄고 중 국가경제, 국민경제, 민족경제에 대한 관념을 고찰한 부분을 통합하여 재구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이 글의 토대가 된 줄고는 다음과 같다.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 형성(1876~1894)-민=

2. 경쟁담론과 국민경제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질서 속에서 정부는 어떠한 기능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던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 경쟁과 시장의 원리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인간의 가족관계가 친애의 관계라면 인간의 사회관계는 우열을 다투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는 인간의 사회적 본성을 경쟁으로 파악했다. 우열을 다투는 것이 ‘活套生意’라고 표현한 것은 경쟁심이 인간사회의 자연스러운 현상임과 동시에 인간이 더 나은 사회를 이루게 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유길준은 경쟁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신 ‘相競相勵’라는 어휘로 설명했다. 다툼이란 의미가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이란 어휘를 회피하고 대신 권장한다는 의미의 ‘勵’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문명화되지 못한 시대에는 ‘경려’에 기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와 명예를 다투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약탈을 하게 되지만 “세상의 흐름이 변해서 점차 개화에 이르게 되면 사람이 언행을 고치고 지식을 연마해서 국가의 법과 기강을 바르게 고치고 민생의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 부귀와 이익을 이루는 자 또한 타인의 이익을 돕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에서 경쟁은 약탈이 되지만, 문명화된 사회에서는 공공의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례로 영국 산업혁명의 발명가들을 예로 들었다. 증기기관이나 방직기계를 발명한 뛰어난 사람들과 그 기술 발명을 도와준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명예와 이익을 얻었으며,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이 기술을 활용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⁴⁾ 법과 기강이 올바르게 바뀌어서 인민

赤子와 『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제21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295-331; 「과산, 식민지 근대 일상생활의 기표, 『아시아문화연구』 제19권, 아시아문화연구, 2010, 23-51;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담론적 실천과 효과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80호, 호서사학회, 2016, 43-79.

의 경제활동의 권리가 보장된다면 개인의 이익추구 활동은 사회와 국가의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즉 인민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와 그 제도를 운용하는 근대 정부가 기능한다면 경쟁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이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법과 기강만으로 개인의 경쟁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문명한 사회에서 “개명한 세상에 타인에 손해를 입히고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비루한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공익을 위한 정치의 법률과 제도가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여,⁵⁾ 약탈적인 이익추구를 법과 제도가 제한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려가 공익과 연결되려면 개인의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상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는 도(경려)가 가족 사이의 친애자정(親愛慈情)과 비교하여 서로 차별이 있는 것은 고유하지만, 긴요하고 덜 긴요한 것에 대해서 서로 구제하고, 걱정과 기쁨을 더불어 같이하여 현재 상황을 정돈하고 많은 사람이 복되고 영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여 개인의 경쟁에도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의 이익을 위하는 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법률과 제도만으로는 개인의 이익 추구 경쟁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친애자정이라는 윤리적 태도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따라서 유길준이 사용한 ‘경려’라는 용어에는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쟁이란 의미에 친애자정이란 도덕 감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 앞서 서술한 『도덕감정론』에서 개인의 이기심과 사회의 번영을 매개하는 것이 신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했고, 그것은 천성 그리고 신의 섭리라는 것이었다.⁶⁾ 아담 스미스가 이야기한 인간의 천성과 신의 섭리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발생하는 선한 효과였다.

4) 俞吉濬, 『西遊見聞』, 交詢社, 1895, 130.

5) 俞吉濬, 『西遊見聞』, 132.

6) A. 스미스,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옮김, 비봉출판사, 1996, 346.

『도덕감정론』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인간의 자연적인 도덕 감정의 힘이었다. 유길준도 이와 유사하게 ‘경려’에 ‘親愛慈情’이란 인간의 도덕 감정을 소환하고 있다. 이점은 경쟁이 규칙만으로 통제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경쟁이 공익적 효과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규칙과 도덕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유길준은 이것 이외의 어떠한 것이 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노동자 임금, 실업자 구제, 물가 관리 등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세간 제 학자의 논의’를 소개하고 비판하면서 “정부의 큰 본분은 인민을 위하여 일을 구해주는 것에 있지 않고, 그 가진 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프랑스 제2공화정이 실시한 동일 임금 정책과 영국의 자국 생산 직물 소비를 강제한 정책이 모두 폐단을 일으켜 폐지되었다는 사례를 들고 있다.⁷⁾ 그는 정부가 임금, 생산, 소비에 직접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19세기 말 세계적으로 확산한 자유주의적 시장질서를 그대로 수용한 것이었다. 동시에 근대 주권국가의 경쟁질서의 규정성이 정부의 역할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시장질서에서 정부는 개인의 경제활동과 그 결과로서 개인의 생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소위 ‘작은 정부’의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유길준은 시장의 자기 조정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친애자정’이란 도덕 감정을 사회적 관계로 확장하고자 했다. 유길준의 경쟁은 경제활동과 도덕 감정이란 사회윤리가 이미 결합한 것이었다.

이러한 설명 방식은 1908년 출판된 『노동야학독본』에서도 등장한다. “스스로 도움이 실상은 서로 도움이다. 가령 농부가 공장의 물건을 사면, 이것은 공장이 간접적으로 농부를 돕는 것이고, 공장이 농부의 곡식을 사면, 농부가 간접적으로 공장을 돕는 것이다.”라고⁸⁾ 하여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시장을 통해 물건

7) 俞吉濬, 『西遊見聞』, 155~161.

을 구입하고 소비하는 행위가 간접적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임을 설명하고 있다. 시장에서의 교환행위는 비록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더라도 남에게 이익을 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앞서 언급한 아담 스미스의 '신의 섭리'와 같은 것으로 설명되었다.

나아가 그는 시장의 교환행위가 공익적 결과를 낳으려면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정직한 노동, 성실한 노동, 근면한 노동이 노동자의 덕목이었다. 약속한 기간을 지키고, 정해진 임금을 받고, 사용자가 만족할 노동의 결과를 낳는 것이 노동자의 의무라고 했다.⁹⁾ 그리고 이러한 노동자의 직업윤리가 지켜진다면, 경쟁은 공익적 효과를 내고, 사회의 미덕이 된다. 유길준은 『서유견문』에서는 자본가의 경쟁과 윤리를 이야기했다면 『노동야학독본』에서는 노동자의 경쟁과 직업윤리를 이야기했다. 시장의 미덕은 시장의 경제주체가 윤리적 태도를 갖추고 경쟁해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대한제국 신문 매체에서 발견되는 경제에 대한 담론은 국부의 확대를 추동하는 것이었지만, 국부를 달성할 행위 주체는 을사조약을 전후로 차이가 있었다. 을사조약 이전 경제발전 담론에서 실천의 주체는 일차적으로 대한제국 정부로 상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신문 매체는 정부를 향해 상업, 농업, 공업 생산의 발전을 위한 제도들과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을사조약 이후에는 정부에 대한 요청보다는 자본가와 지식인 그룹이 경제발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언설이 매체의 지면을 뒤덮었다. 국가주권이 침해받은 상황으로 인해 경제발전은 오히려 대한제국의 자기 결정권을 증명하는 것이었고, 그 증명은 국가권력이 아닌 인민의 몫이 된 것이었다.

사회진화론적 경쟁담론이 신문 매체를 통해 확산했다. “지구상 인물의 태어남이 날로 번식하여 각기 생존을 위해 경쟁하고,”¹⁰⁾

8) 俞吉濬, 『西遊見聞』, 90.

9) 俞吉濬, 『西遊見聞』, 30-34.

10) 朴殷植, 「本校의 測量科」, 『西友』 제17호, 1908년 4월.

라는 표현에서 경쟁은 유길준의 '경력'과 달리 윤리적 의미를 완전히 탈각했다. 생존적 능력을 분취해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 속에서 자본가의 자본투자는 개인의 사익이란 의미가 소거되어 있었다.¹¹⁾

장지연은 대한자강회의 한 연설에서 “한 나라의 경제는 수입과 수출의 균형 여부로 알 수 있고,…… 우리 자강회는 식산흥업의 발달을 기대하는 것을 강령의 제1항에 넣어야 한다.”라고 하여 국가 경제의 발전과 무역수지를 같이 위치시켰다. 무역적자가 증가하여 갔던 상황에서 무역수지의 균형을 강조한 것은 수출을 위한 생산을 추동하는 것이었고, 생산의 주체는 자본가와 지식인이었다.¹²⁾

그리고 경제발전의 주체로 자본가의 역할을 강조한 담론은 을사조약 이후 통감부가 새롭게 발굴했던 투자처에 대한 정보의 확산, 증가하는 일본인의 이주,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만주 무역의 증가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투자처가 확대된 상황과 맞물려 그 영향력이 증가했다. '독립'을 위해 부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경쟁담론의 확산으로 인해 경제에 대한 사유는 상품의 생산과 수출 증대라는 자본가의 지향과 일치되어서 갔고, 인민의 생계를 위해 분배의 기능이 필요하다는 관념은 망각되어 갔다.

그러나 '생산'의 주체였던 '자본가'의 경쟁이 '공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신문 매체에서는 자본가의 '사익'이 공익적 결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자본가의 윤리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를 '상업 전쟁'의 시대로 규정했던 『황성신문』은 농업과 제조업을 발전시켜서 상품을 만주 시장으로 진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¹³⁾ 또한, 교통수단의 발달로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발달시킬 기회가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은 '옛 대한'과 달리 '신대한'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경제발전을 통해 대한

11) 『大韓每日申報』 1909년 4월 8일자 「經濟恐慌의 原因 續」.

12) 『皇城新聞』 1906년 4월 30일자 「大韓自強會演說 殖産問題 張志淵氏」.

13) 『皇城新聞』 1910년 2월 5일자 「商業戰爭의 準備를 注意함이 最要함」, 2월 19일자 「勸告國內實業家」, 4월 27일자 「大陸發達の 時代」.

제국을 일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¹⁴⁾ 그러나 ‘신구 대한이 교체되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舊道徳과 新知識’의 상호조화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경제주체의 사회윤리를 강조했다. 만약 신지식에만 의존할 경우 개인 사업과 사회 풍류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¹⁵⁾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기업심’만으로는 국가와 민족을 보존하기 어려우므로 자본가는 공익을 위한 의협심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고 했다.¹⁶⁾ 『황성신문』의 바람직한 자본가 상은 신지식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구 도덕으로 공익적 가치를 위해 실천하는 자였다.

『대한매일신보』은 이주 일본인의 이윤추구 활동을 지원했던 통감 정치에 대해 “국가의 공익을 위함도 아니고, 인민의 편리를 취함도 아니고 단지 일개 외인의 사익을 위하고” 있다고 비판함과 동시에 “동포의 제일 중요한 업은 여각이거늘 이전부터 일진회의 방해로 인해 세력을 잃고 점점 시들어” 지는 상황에 분노하면서 조선인 자본가가 분투할 것을 요청했다. “오호라 용산방 동포여 장차 어떻게 생활하고자 하는가, 생명의 업을 잃은 자 동포가 아닌가.”라고 하는¹⁷⁾ 외침은 자본가가 민족 보존의 임무를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 정부가 처리하는 일이 공평치 못하여서 한인과 외국인 사이에 권리를 두고 경쟁할 때면 정부가 외국인을 위해서 편리를 봐주는 것이 많고, 외국인의 사업을 번성하게 해 주는 일이 많으니 民情이 시끄럽게 된 것을 세상 사람들이 모두 목격하는 것이다.”¹⁸⁾라고 하여 조선인 자본가가 차별받고 있다고 보고, 이를 정치 문제로 쟁점화했다. 이러한 담론은 한인 자본과 일본인 자본을 대립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자본화 과정의 문제를 민족 간 대

14) 『皇城新聞』 1910년 3월 2일자 「今日新大韓의 位置」.

15) 『皇城新聞』 1910년 2월 6일자 「新舊交換時代가 最有可觀」.

16) 『皇城新聞』 1910년 3월 6일자 「企業家와 義俠家의 討論問題」.

17)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7일자 「麻浦架橋에 對하야」.

18) 『大韓每日申報』 1910년 4월 20일자 「人民의 境遇」.

립으로 이전시키고, 자본주의 경쟁 질서를 그대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자본투자의 폭력성을 민족문제로 환원시킴으로써 '민족에 의한' 자본투자를 긍정적으로 승인하도록 하는 것이었으며 동시에 자본가의 경쟁을 국가 경쟁과 동일시하여 경제와 자본가를 일체화하여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3.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모호성

총독부가 선포한 회사령은 자본투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에서 반대 여론에 직면했다. 일본 자본의 조선 투자에 대한 제한, 조선인 객주 영업에 대한 통제는 자유로운 자본투자를 제한하는 것이었다.¹⁹⁾ 그러한 가운데 일본의 만주 진출이 진행되고, 조선은행권이 만주에 유통되면서 조선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 일본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할 필요가 발생했다. 이에 조선은행 총재였던 이치하라 모리히로(市原盛宏)는 1914년 신년 담화에서 대일본 무역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경제의 독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²⁰⁾ 이 시기 대일본 무역적자는 1910년 1천 987여만 원, 1912년 4천 613여만 원, 1913년 4천 701여만 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반면 대일본 무역에서 무역흑자를 나타냈던 금은의 무역흑자는 1910년 732여만 원, 1912년 865여만 원, 1913년 1천 74여만 원으로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²¹⁾ 조선에서 상품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투자를 제한하고 있는 조치를 폐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조선 회사령 폐지안이 동년 2월 일본 제국의회 중의원에 제출되었고,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었지만, 조선 총독부가 아직

19) 전우용, 「1910년대 객주통제와 ‘조선회사령’」, 『역사문제연구』 제2권, 역사문제연구소, 1997, 103~147.

20) 『每日申報』 1914년 1월 1일자 「朝鮮經濟界 將來에 對한 希望」.

21) 송규진, 「1910년대 관세정책과 수이출입구조」, 『역사문제연구』 제2권, 1997, 역사문제연구소, 23~36.

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폐지가 결정되지 못했다.²²⁾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이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고, 일본은 전쟁특수를 맞아 생산을 급격히 확대할 상황에 놓였다.

동년 11월 총독부는 이러한 상황에 밀려 회사령을 개정했다. 회사 설립에 필요한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회사를 더 쉽게 설립하도록 했다.²³⁾ 한호농공은행장이었던 박완혁은 회사령이 폐지되지 않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러나 허가 절차가 간소화된 것은 조선 산업계의 행운으로 조선인이 회사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하여 회사령 개정을 환영했다.²⁴⁾

회사령 개정으로 회사 설립 허가가 완화된 조치에 대해 『매일신보』는 투자의 자유가 확대되고, 경제영역에서 조선인의 자기 결정권이 확대될 기회로 해석했다.²⁵⁾ 회사령 개정은 이후 회사령의 폐지에 대한 여론이 격화되었다. 그 과정에서 회사 설립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²⁶⁾ 또한, 제1차 세계대전으로 상품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조선 사회에서는 '기업열'을 추동하고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선 자본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경제 담론이 확산했다.

이러한 상황에 발 빠르게 대응한 것은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이었다. 1914년~1919년 사이 이들이 발간했던 잡지 『학지광』의 경제 관련 게재문은 조선인 경제의 발전에 대한 방법을 제시했다. 조선인 경제발전에 대한 담론은 조선의 산업발전과 보호무역을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고, 조선인 기업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

22) 『每日申報』 1914년 2월 2일자 「東京特電: 下院 제출의안」, 3월 7일자 「會社令廢止案」, 3월 17일자 「會社令委員會」, 3월24일자 「會社令 후의 會社」.

23) 『每日申報』 1914년 11월 13일자 「會社令 一部 改正」.

24) 『每日申報』 1914년 11월 15일자 「産業界의 幸運, 會社令의 改善에 대하여, 漢湖農工銀行長 白完熾氏談」.

25) 『每日申報』 1914년 11월 17일자 「會社令 一部 改正」.

26) 『每日申報』 1914년 12월 11일자 「朝鮮民族觀(13)」; 1915년 11월 26일 「會社令存續의 必要」.

해서는 중소기업가들이 자금을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선인 금융기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리고 조선인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선인에 대한 지식과 기술 교육이 필요하며, 조선인들이 근면과 근검의 정신을 체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 시기의 경제전쟁은 평화적인 전쟁이라고 설명하면서 민족성과 경제전쟁의 승패를 연결했다. 세계의 민족 중 기업가 정신이 투철한 앵글로색슨족과 게르만족은 발전했지만, 그렇지 못한 민족은 모두 국가가 망했다고 하면서 민족의 흥망이 기업가의 양어깨에 달려있다고 했다.²⁷⁾ 그리고 조선인 경제가 발전하려면 조선인이 국산품을 애용해야 한다고 하면서 독일의 경제발전이 보호무역 정책으로 가능했다는 사례를 설명했다.²⁸⁾

개인적 차원의 근검절약은 소극주의 처방이고,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설립 등은 적극주의적인 처방으로 분류하고, 양자를 모두 채택해야 조선인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²⁹⁾

제1차 세계대전이란 전쟁특수로 경제발전이 가시화된 상황에 편승하여 민족 간 경제전쟁의 전사로서 자본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담론이 다시 공론장에 등장했다. 그러나 담론 내부의 서사는 1910년 이전과 다른 점이 있었다. 국가 주권과 경제의 관계 설정이 다른 점이었다.

1910년 이전에는 경제의 발전이 곧 국가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경제와 주권은 상보적 관계로 설정되었다. 반면 『학지광』에서는 ‘경제전쟁’을 하는 단위를 국가가 아닌 민족으로 설정했고, ‘독립’의 주어는 국가 아닌 조선인 경제로 상정되었다.

경제영역에서 자기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를 스스로 영위하는 독립된 행위 주체로서의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

27) 務實生, 「企業論」, 『學之光』 제3호, 1914년 12월.

28) 李康賢, 「朝鮮産産繼奨勵策에對하야(寄書)」, 『學之光』 제6호, 1915년 7월.

29) 盧翼根, 「經濟振興에對한余의意見」, 『學之光』 제6호, 1915년 7월; 盧俊泳, 「朝鮮사람生活難의原因」, 『學之光』 제11호, 1917년 1월.

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조선 민족이 경제영역에서 민족의 결정권을 확보한다는 것은 근대 국제 질서에서 스스로를 영위할 수 있는 민족공동체로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는 기존연구가 지적했듯이, 『학지광』의 유학생들은 민족을 시장에서의 경쟁 단위로 상상함으로써 밖으로는 독립성과 안으로는 공동운명을 공유한 ‘사회’로 표상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이들의 상상은 시장을 통해 가치가 정해지는 경제활동의 결과에 속박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조선인과 일본인은 분명히 구분될 수 있지만, 시장을 매개로 복잡하게 연쇄된 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활동은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와세다 대학 상과 유학생인 노준영³¹⁾은 경지면적, 농가 호수, 1개월 평균소득, 농가의 수확량 등에 대한 일본과 조선의 통계조사를 토대로 농가 1호당 경영하는 경지면적은 조선이 일본보다 넓지만, 1反의 면적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양은 조선이 일본보다 적다는 결론을 내렸다. 조선농업의 낙후성이 통계라는 과학적인 지식을 통해 확인되었을 때, 낙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향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는 조선농업의 낙후성을 증명하고, 이를 통해 농업개발의 절박성을 주장했다.³²⁾ 동 대학 전문부 정치경제과의 유학생인 김철수는 ‘국민경제상 농업의 지위’라는 제목의 글에서 국민경제=조선경제로 상정했다. 그는 조선경제를 농업, 공업, 임업 등의 산업구성 비중으로 볼 때 농업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은 낙후된 경제라고 규정하고,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조선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그리고

30) 김현주의 연구(「‘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상허학보』 제22권, 상허학회, 2008, 41~76)는 『학지광』의 지식인들이 국가를 괄호에 넣고 개인-사회를 통해 민족을 구상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31) 노준영은 경남 함양군 출신으로 와세다 상과를 졸업하고 1918년 조선은행 서기가 되었다. 이후 삼일산업 주식회사, 거창 자동차 주식회사 사장,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

32) 盧俊泳, 「朝鮮사람生活難의原因」, 『學之光』 제11호, 1917년 1월.

과정에서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끌 주체로 ‘조선인’을 상정했다.³³⁾ ‘조선’은 조선인이 개발해야 할 지역이었으며, 조선경제는 조선인 경제는 동일한 범주의 영역으로 상상되었다.

조선경제와 조선인 경제가 구분되지 않았던 인식은 조선경제의 최대 호황기라고 했던 제1차 세계대전 시기 현상에 대한 진단에서도 드러났다. “지금 이 기회는 우리 실업 사회에 유일한 서광”이라는 언급 속에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발전하고 있는 일본경제와 연쇄된 조선경제의 발전이 조선인 실업 사회의 발전과 연동될 수 있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다.³⁴⁾ 일본경제와 조선경제의 연동 관계를 인정하고, 조선경제와 조선인 경제를 아직 분리해서 사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려준다.

『학지광』을 통해 형성된 조선인 경제에 대한 상상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일본과 조선의 경제발전이란 상황에 의해 추동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기회로 삼아 조선인이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욕망이 자본가의 경제 활동에 투영된 것이었다. 이들의 구상 속에서 조선경제와 조선인 경제를 구분하려는 경계에 대한 인식은 모호했고, 자본가만을 주체한 그들의 경제공동체 내부는 어떠한 갈등도 존재하지 않은, 막연하게 균질적인 공간이었다.

4. 민족경제와 유교 윤리

1) 파산과 민족경제

조선경제와 조선인 경제가 분리되어 있다는 상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불경기와 관련을 맺고 있었다. 혁명 이후 전개된 러시아의 내전과 일본의 시베리아 철병, 그리고 제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자 전쟁특수에

33) 金喆壽, 「國民經濟上農業의地位」, 『學之光』 제18호, 1919년 1월.

34) 盧翼根, 「實業振興에對한根本方針」, 『學之光』 제17호, 1918년 8월.

부응하여 생산과 금융 유통성을 확대해 왔던 일본경제가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 일본은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인해 금융공황이 발생했다.³⁵⁾ 일본의 은행과 상점의 파산이 조선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³⁶⁾

1919년부터 조선에서는 법원의 부동산경매 건수와 파산신청에 대한 선고 건수가 매년 급격히 증가했다. 1920년에 창간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5월부터 조선경제의 불경기를 알리는 글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조선에서는 재계 불황의 영향이 일본과 같이 심대하지는 아니하나 …… 소자본가 중 파산자가 빈번히 출현하고 府內뿐 아니라 지방 또한 그러하며 대자본 측은 아직 이와 같음에 미치지 아니하나 전도는 자못 경계를 요”한다³⁷⁾ 기사에서는 일본과 비교해 아직 경제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지만, 이미 조선의 소자본가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고 있고, 대자본가도 곧 손해를 입게 된다는 전망을 했다. 일본경제와 조선경제의 연쇄 관계가 이번에는 불경기로 확인되고 있었다.

예상대로 6월에는 불경기가 더욱 확산하였다. 『동아일보』는 서울 남대문 시장의 곡물상과 잡화상은 채권을 회수할 길이 막막해졌고, 은행을 통해 발행한 당좌어음의 상환 기한을 맞추기 어렵고, 판매량도 크게 줄어든 상황을 보도했다.³⁸⁾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일반 상계의 앞길은 오직 「파산과 멸망」의 두길 밖에 없을까 싶다.’라는 언급은 앞으로 경제불황이 더 심화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서울 남대문 시장의 상점 파산 현상은 서울 유통업 전체로 확대되었고, 평양 인천 목포 부산 등 지방의 주요 도

35) 小林英夫,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柏書房, 1994; 『東亞日報』 1921년 3월 28일자 「加州日銀危險期切迫」, 6월 8일자 「米經濟極恐慌」, 「프락스즈리트」誌 調査에 의하면 四月中破産率 七十四퍼센트나 된다고.

36) 『東亞日報』 1920년 5월 31일자 「東京市内の破産會社 七十個所」, 8월 4일자 「大阪市綿絲布商 前川商店破産」.

37) 『東亞日報』 1920년 5월 14일자 「小資本破産者頻出」, 20일 「財界의 恐慌과 布木業者의 慘狀」, 「布木價 3,4割이 暴落」.

38) 『東亞日報』 1920년 6월 7일자 「錢慌의 餘波 悲風慘雨(五) 破産 失職」.

시로 확산해 갔다.³⁹⁾

이후 언론은 경제문제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총독부가 3.1운동 이후 조선인 민심 수습책으로 ‘조선 본위’의 경제개발을 추진했지만, 경제 상황을 계속 악화하고 있었다. 경제문제는 총독부 정책을 비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소재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1921년 총독부가 설치한 산업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조선인 자본가의 요구를 무시했다는 여론이 확산하고, 조선경제 문제는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문제로 인식되었다.⁴⁰⁾

총독부의 ‘조선 본위’ 산업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동아일보』는 민족 스스로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물산장려운동은 이러한 담론의 실천 운동이었다.

계몽운동의 입장에서 문화 운동을 추진하고 있었던 지식인들은 불경기에 따른 조선인의 파산 현상을 총독부의 경제정책에서 소외된 조선인 자본가의 좌절과 빈곤한 조선인의 비참한 생활과 연결했다. 재조일본인과 조선인의 경제 상태를 비교하고, 재조일본인의 경제활동을 포함하는 조선경제에서 조선인 경제를 구분 짓기 시작했다. 조선인의 파산과 빈곤은 조선경제의 발전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 반대의 것으로 대비되었다.

이광수는 조선인 자본가의 파산을 조선 민족의 파산으로 치환했다. 그는 “빈궁이라고 하면 부족한 것이지만 아직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지만, 파산이라고 하면 빈궁함을 넘어서 살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이라고 하여 파산과 빈궁은 다르다고 했다.⁴¹⁾ 부족한 상태인 빈곤과 달리 파산은 사망 선고와 같다는 것이었다. 파산한 조선 민족에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이 스

39) 『東亞日報』 1922년 9월 27일자 「續出하는 破産 商人」, 10월 24일자 「破産者 簇出」.

40) 김윤희, 「1920년대 초 ‘민족경제’ 와 통계지식-담론적 실천과 효과를 중심으로」, 56~58.

41) 魯啞子(이광수), 「少年에게(三)」, 『開闢』 제19호, 1922년 1월.

스로 삶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망 선고를 내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조선 수출입 통계를 제시했다. “매년 1억 수 천만 원씩 조선 민족은 그 생활에서 밀려가는 것”이라고 하여 조선의 무역수지 적자를 조선인 경제의 파산상태로 해석했다. 경제 공동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로 조선 무역수지를 제시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그가 경제를 읽는 기준이 자본 활동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는 ‘지식이나 부력으로 나 전 민족의 중추 계급’을 공무원과 교원, 의사, 변호사 등의 자유업, 그리고 상업가로 보았다. 이들이 일본인과 비교해서 수적으로 열세라는 점이 바로 조선 민족이 스스로 자본주의의 물질생활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임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⁴²⁾

이광수는 파산을 민법상 규정된, 경제 행위 주체의 소멸이란 의미로 사용했다. 그래서 그가 조선 민족에 파산을 선고한 것은 곧 근대 사회에서 조선 민족이 시민권을 획득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광수의 조선 민족에 대한 파산 선언은 그의 ‘민족 개조론’의 배면을 구성하기 위한 ‘위기’의 수사였다.

한편, 『동아일보』는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인 경성의 조선인 시민」이란 제목의 기사를 통해 불경기의 영향이 조선인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총독부가 조사한 서울의 토지 가옥 등의 부동산 소유 통계, 법인세 납부 통계에서 일본인과 조선인의 현황을 비교하고, 조선인 유민의 증가 현상을 제시하면서 “조선 사람의 서울은 텅텅 비고야 말 것이다.”라고 하여 서울이 이제는 조선인의 것이 아님을 주장했다.⁴³⁾ 그리고 이러한 현상은 대구, 부산, 평양, 원산 등의 도시에서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농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조선경제는 발전하지

42) 魯啞子(이광수), 「少年에게」, 『開闢』 제17호, 1921년 11월.

43) 『東亞日報』 1923년 11월 6일자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인 경성의 조선인시민」, 「도지가옥의 삼분지이도 일본인에게 들어가고 상공업의 생산액도 삼분지일밖에 아니되고」, 「遊衣遊食의 食口만 19만」.

만, 조선인의 경제는 파산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⁴⁴⁾

동일한 서사는 『조선일보』에서도 등장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 집행, 자산가에 대한 파산선고 등이 증가하는 상황을 “우리 민족의 생활이 경제적으로 급격히 파멸하는 현상”으로 해석했다.⁴⁵⁾ 『동아일보』와 마찬가지로 서울을 비롯하여 평양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점 파산의 참경을 보도했다.⁴⁶⁾ 또한, 서울 부동산 소유와 세금납부에 대한 민족별 통계를 제시하고, “1/3도 남지 않은 시가지 …… 이 숫자이야 말로 우리 민족적 경제의 파산 선언”이라고 했다.⁴⁷⁾ 민족에 대한 파산 선언은 민족의 경제 상태를 상징하는 언표였다.

1920년대 민족주의 정치기획의 담론은 총독부의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경제영역에서 민족차별에 대한 과학적 증거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조선경제와 조선인 경제의 연쇄적 관계를 끊고자 했다. 그리고 파산에 직면한 경제공동체의 위기를 함께 헤쳐나갈 자본가와 지식인을 소환했고, 그들의 행위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도록 조선인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족공동체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국민경제의 모습으로 다시 각인되었다. 그리고 1910년대 경제발전을 통해 대외적 자기 결정권을 증명하고자 했던 『학지광』의 지향은 연속성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 지향으로 나아갈 경제공동체 내부는 경제불황으로 균열이 커지고 있었다.

일본의 급격한 산업화와 연쇄된 조선인 자본가와 지주의 이해관계 변화, 조선인 노동자와 소작농의 생활상태 악화로 계급적 자각이 확산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과

44) 『東亞日報』 1924년 3월 1일자 「경제적파산(상), 3월 5일 「경제적파산(하), 6월 12일자 「줄어드는 조선인토지, 8월 5일자 「농사시설의 모순 농잠구상파산속출」.

45) 『朝鮮日報』 1924년 5월 18일자 「경제적으로 명증하는 참상」.

46) 『朝鮮日報』 1924년 10월 25일자 「파산 폐점! 평양 시가의恐慌, 1925년 1월 16일자 「전조선인의 큰 파산이 온 것을 깨달으며」.

47) 「仁川아 너는 엇더한 都市, 『開闢』 제48호, 1924년 6월.

사회주의 운동 세력의 등장은 계급에 의한 민족 내부의 균열을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했다. 그러나 사회주의 정치기획 담론 역시 민족 경제적 상상에 기초하고 있었다. 심각한 생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분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혁명의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선인에게는 생산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조선인의 생활상태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던 사회주의 정치기획 담론 역시 총독부의 조선경제 조사통계에 근거하여 조선경제 상태를 무역수지와 산업구조를 기준으로 진단했고, 조선인 전체의 생산성 증진이 곧 조선인의 일상적 생활상태의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총독부는 매년 인구, 무역, 산업, 재정 등의 상황을 조사하고 분야별 민족별 구성 현황을 조사했다. 총독부의 통계 생산 방식과 민족별 상황에 대한 통계 지식은 지식인들이 민족의 경제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지식적 토대였다. 무역수지와 산업구조가 국민경제의 상태를 진단하는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경제 각 분야의 민족별 구성에 대한 조사는 조선인의 경제 상태를 진단하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었다. 이를 통해 ‘민족경제’ 내부는 생산증대-소득증대-소비확대-경제발전이 선순환적 관계라는 국민경제적 상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

과산한 조선 민족은 김동성이 비유했듯이 “일본인은 자본가, 조선인은 노동자”라는 계급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⁴⁸⁾ 또한, 『동아일보』가 “조선인의 경제력은 조선의 부력과 반비례”한다는 주장에서⁴⁹⁾ 드러나듯이 조선 민족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수탈받고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트로 은유 되었다.

국민경제학을 비판했던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빈곤은 그 생산의 힘과 크기에 반비례한다.”라고 주장했는데, 민족주의 정치기획 담론에서 만들어진 민족경제가 마르크스의 주장을 통해 의미화되고

48) 『東亞日報』 1922년 6월 15일자 「朝鮮人の 觀察한 朝鮮産業大觀(2)」.

49) 『東亞日報』 1923년 10월 7일자 「物産獎勵와 副業共進會」.

있었다는 점은 민족주의 정치 담론이 사회주의 담론을 포섭하고 있었음을 알려준다.⁵⁰⁾ 그리고 이것은 자본주의 계급대립을 일본인이 주인인 조선경제와 경제발전에서 소외된 조선인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동원하여-계급대립을 민족대립으로 치환하여 계급 갈등을 희석하는 것이었다. 민족 내부에서 형성된 계급 차별과 억압을 민족문제로 포섭함으로써 계급의 혁명성을 소거하는 것이었다. 민족주의 정치기획 담론 내부에 코드화된 마르크스의 언표는 자본주의 민족경제를 지지하기 위한 전략적 서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동시에 계급적 자각을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각성으로 선회시키도록 하는 효과를 내는 것이었다.⁵¹⁾

한편, 민족경제 담론을 확산시켰던 물산장려운동 세력은 파산한 조선경제에서 탈출하기 위해 조선인의 소득이 증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실천 방안들을 모색했다. 그리고 그 담론적 실천을 총독부가 생산한 지식에 의존했다.

물산장려회 기관지였던 『산업계』는 조선의 부력은 아직 통계적으로 조사한 바가 없어서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대략 130억 내외라고 했다. 그리고 이 액수는 관동대지진으로 없어진 일본의 손해액 총액과 비교하면 많지 않은 액수라고 했다.⁵²⁾ 조선의 부가

50) 『동아일보』는 마르크스가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근거는 생산력의 발달에 있는 것이니 물산장려운동 역시 사회주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을 민족경제 담론 안으로 포섭하려 했다. 여기에 대해 이성태는 민족이란 미명 하에 계급 문제를 업헤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東亞日報』 1923년 3월 20일자 「中産階級の 利己的運動, 社會主義者が 본 物産獎勵運動(이성태)」).

51) 물산장려운동 세력은 기존 연구를 통해 알려진바, 민족주의 우파와 좌파, 지구 금융자본가와 상공업자본가, 생산력 증진론과 토산품애용론의 실천 방향 차이, 영국의 신(new)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영향 등 다양한 계급적 이해와 정치적 실천적 지향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의도와 지향이 만들어낸 경제담론이 조선경제에서 조선인 경제를 분리해냄으로써 경제공동체 내부의 동질성을 구성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다. 민족경제 담론은 각기 다른 세력에 의해 과잉결정된 것이다.

52) 「朝鮮의 富力概算」, 『産業界』 제2호, 1924년 1월.

일본의 부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본과 조선의 농업 생산량을 비교하여 조선인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지만, 농업 생산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⁵³⁾ 또한, 총독부가 조사한 공장 현황 통계를 근거로 조인 운영 공장의 규모가 영세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⁵⁴⁾ 총독부 조사통계를 통해 조선인의 생산성이 일본인보다 현저히 낮다는 점을 증명하고자 했고, 이 증명을 통해 경제발전에 대한 민족적 각성을 요청했다.

물산장려운동 세력과 조선 총독부는 조선인의 소득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하고 있었고, 방법으로 부업장려를 동일하게 제시했다. 총독부는 부업이 기존 경제구조 내에서 중산층 이하 계층이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부업장려를 위해 총독부 기관지였던 『조선』에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모범적인 부업 사례와 직종을 발굴하는 기사를 지속해서 게재했다.⁵⁵⁾

『산업계』에서도 농촌의 부업, 부업적 소공업, 소자본으로 경영할 수 있는 상업 등을 소개하는 글을 실었다. 대표적인 부업으로 비누 제조, 돼지와 닭의 사육 등이 소개되었다.⁵⁶⁾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품종개량과 농수 공급을 위한 수리조합 이용 등에 조선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⁵⁷⁾ 나아가 농한기와 부녀자 등 농촌의 유희인력을 활용한 가마니 생산이 농촌의 대표적인 부업으로 소개되었다.⁵⁸⁾

53) 「朝鮮農産地와 生産力」, 『産業界』 제1호, 1923년 12월; 「朝鮮農業에 관한 數字的 考察」, 『産業界』 제3호, 1924년 3월.

54) 「朝鮮의 副業的 小工業」, 『産業界』 제2호, 1924년 1월.

55) 「副業か盛な道也味里」, 『朝鮮』 12月号, 1923년; 「副業か盛な道也味里」, 『朝鮮』 1월호, 1924년; 「慶尙南道 晉州郡의 副業獎勵計劃」, 『朝鮮』 4月号, 1924년; 「改良種豚鶏普及狀況」, 『朝鮮』 6月号, 1924년. 이외에도 지역의 경제 상태와 개발 가능성을 진단한 지역 탐방 기사 등을 실고 있다.

56) 「主要副業인 豚鶏飼養(一記者)」, 「造船工業中有望한 石鹼製造(編輯室)」, 「小資本經營의 商業」, 『産業界』 제5호, 1924년 9월.

57) 漆室談, 「農事改良에 관하여」, 『産業界』 제3호, 1924년 3월.

58) 徐佑忠, 「朝鮮農村經濟振興策」, 『産業界』 제5호, 1924년 9월.

특히 부업의 정의와 장점을 소개한 『산업계』의 글은 『조선』에 게재된 ‘부업의 필요 및 특질’의 내용과 거의 같았다.⁵⁹⁾ 앞서 언급했던 『산업계』에서 농촌의 대표적인 부업으로 장려했던 가마니 생산은 이미 『조선』에서 유망한 농촌 부업으로 제시한 것이었다⁶⁰⁾ 또한, 『산업계』에서 부업적 수공업으로 마포 생산을 소개했는데,⁶¹⁾ 이 글이 게재된 호에는 중국 마포 수입액의 추이를 제시하면서 조선인의 마포 생산을 보호하기 위해 마포 수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⁶²⁾ 그러나 이 두 개의 글은 『조선』에 게재된 ‘조선 織業의 현상 및 장래’의 내용과 거의 유사했다.⁶³⁾ 『산업계』는 부업에 대한 진단과 전망뿐만 아니라 면화에 대해서도 『조선』에 게재된 글을 참조하고 있었다.⁶⁴⁾ 총독부가 재조일본인 자본가의 요구만을 수용한다고 비판했던 민족주의 지식인들은 그 담론적 실천을 총독부 기관지인 『조선』에 의존하고 있었다.

식민지배가 필연적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 민족차별 문제는 조선인이 총독부 정책에 반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었다. 그리고 민족차별에 대한 조선인의 반감은 총독부의 정책적 의도를 의심하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하는 것이었다. 한편, 민족주의 정치기획 담론으로 차별의 경험이 조선인 사회에서 공유되면서, 차별과 억압에 대한 반감은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각성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각성은 조선인이 시장의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주체-경제적 중간층-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동력이었고, 결과적으로 자본축적 위기로 작동하지 않는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을 회복시키는 효과로 연결될 수 있

59) 「副業の必要及特質(西村保吉)」, 『朝鮮』 9月号, 1923년; 徐佑忠 「朝鮮農村經濟振興策」.

60) 「朝鮮における繩巾の生産について」, 『朝鮮』 11月号, 1923년.

61) 「朝鮮の副業的小工業」, 『産業界』 제2호, 1924년 1월.

62) 「中國麻布收入額」, 『産業界』 제2호, 1924년 1월.

63) 「朝鮮機業の現状及將來」, 『朝鮮』 11月号, 1923년.

64) 「棉花の種類와 性質」, 『産業界』 제4호, 1924년 7월; 「棉花の種類와 性質」, 『産業界』 제5호, 1924년 9월; 「棉花と木浦」, 『朝鮮』 4月号, 1924년.

는 것이었다.

『동아일보』는 물산장려운동의 진정한 의도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족적 자멸을 방지함에도 조선인이란 조선인은 모두 정말 무산자다운 무산자가 되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니, 곧 ‘일하지 아니하는 자는 먹지 말라.’는 진의를 이해하는 노동자의 수가 증진하기를 절망하는 것이 소위 물산장려운동의 진정골수라 하겠다.”⁶⁵⁾ 이 글은 민족경제의 담론적 실천이 조선인을 경제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노동자로 자각시킬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었다.

2) 전통의 사회윤리와 민족의 각성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 문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개조 사상이 확산하였다. 제국주의 침략성과 독점 금융자본의 폐해에 대해 비판하고, 서구 자본주의의 물질주의를 시정하려는 사상적 조류가 바로 세계개조·사회개조의 사상이었다. 러셀, 카펜더 그리고 독일의 문화주의 등을 수용하여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신 개조에 관한 주장에 제기되었다.⁶⁶⁾ 조선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종교적 차원에서 정신 개조를 주장한 이들은 천도교 세력이었다. 이들은 경제파산이 자본주의의 폐해인 물질성과 투기성에 빠진 조선 민족의 정신에 원인이 있다고 보았다. 결과적으로 자본주의 물질문명에 물든 조선인의 정신상태가 궁극적으로 민족경제를 파산시켰다고 보았다.

파산 현상과 조선인의 경제생활 사이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이광수와 천도교 세력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이광수는 조선인 유산자의 파산과 조선인 경제발전의 거시지표에 주목하여 조선인 유산자를 조선 민족의 경제 상태를 대표하는 자로 표상했

65) 『東亞日報』 1923년 10월 7일자 「物産獎勵와 副業共進會」.

66)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 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129.

다. 반면, 천도교 세력은 유산자의 행위에서 발견되는 자본주의적 물신성과 투기성이 조선 민족의 경제 관념에 이미 내재해 있다고 보았다.

이광수는 조선인 자본가를 경제공동체의 대표자로 상정했고, 이때 조선인 경제공동체 내부는 어떠한 균열도 없는 균질한 공간이었다. 반면 천도교 세력은 유산자의 문제가 무산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고, 경제공동체 내부는 계급이라는 균열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물론 양자 모두는 파산 현상에서 발견된 조선인 경제생활의 취약성을 조선 민족 전체로 확장하여 경제공동체를 구상했다. 그리고 경제공동체로 묶인 조선인이 함께 풀어야 할 문제가 바로 자본주의 물신성과 투기성을 내면화하고 있는 조선인의 경제 관념이란 점에 동의했다. 조선 민족의 경제 상태와 생활 관념이 근대 사회를 스스로 영위할 수 있는 '주체'로서 자격 미달이라는 것이었다.

경제 현상을 설명했던 '파산'이 조선 민족 전체의 생활상과 경제 상태를 설명하는 어휘로 등장했던 배경에는 식민지 사회에서 민족공동체를 상상했던 지식인의 정치기획이 존재했다. '파산'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민족공동체의 위기 담론이었다. 그리고 일본인과 함께 살아야 했던 조선경제의 특수성으로 인해 경제구조 내부의 문제보다는 민족의 상태, 민족의 정신이란 집단성을 자각하게 하는 기폭제였다.

“세계 다른 민족과 대조하여서 모든 것이 파산적이었음을 각오하고 이제 잡을 만한 유일의 수단은 오직 실력양성에 있음을 깨달았다”⁶⁷⁾라는 이돈화의 언급은 민족에 대한 파산 선언이 민족경제의 발전을 위한 각성을 추동하기 위한 언표였고, 다시 계몽의 서사가 부활할 수 있는 배경이었음을 알려준다.

1920년대 계몽 담론은 전근대와 근대를 극복해야 하는 두 가지의 과제를 모두 포함하고 있었다. 계몽 담론에는 비과학적이고

67) 李敦化, 「歲在壬戌에 萬事亨通」 『開闢』 제19호, 1922년 1월.

비합리적인 전근대적 문화와 서양 물질문명이 배태한 퇴폐와 몰신성을 동시에 극복해야 하는 두 과제가 병존했다. 여기에 더해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조선인 경제가 총체적으로 파산했다고 인식하는 한 조선의 개조 사상은 서구 문명을 전면적으로 비판하고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없었다.

이동곡은 「동서의 문화를 비판하고 우리의 문화 운동을 논함」이란 글에서 서양의 물질문명을 비판하고 동양의 정신문명을 소환할 것을 주장했다. 그는 서양인은 자연을 정복하고 개조하지만, 동양인은 자연과 함께 융화한다고 하면서, 문화 운동의 최고 단계에 오르기 위해서 조선인은 한편으로는 규율과 개조에 노력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정신의 수양에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단순히 전자에만 노력하면 인간은 장차 노동의 한 기관을 이룰 뿐이고, 또 후자만을 능사로 삼으면 인간은 생존의 경쟁에서 자립할 수 없다고 하여 서양의 물질문명과 동양 정신문명의 조화를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량치차오 씨는 자신이 저술한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 중에서 서양문명의 파산을 선언하고 동양문명의 이로움을 논”했지만, “서양 문화를 받드는 이때 이상의 논의가 세상에 유행하면 참으로 앞날에 큰 장애가 아니라 할 수 없다.”라고⁶⁸⁾ 하여 서양 문화의 효용성을 더 강조했다. 그에게 동양 문화는 서양 문화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한 보조적인 것이었다. 이 글은 기존 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물질적 영역에서는 ‘문명기획’을 추진해야 했으며, 정신적 영역에서는 조선적인 것(역사, 문화, 민족성)을 찾는 작업”을 병행했던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주장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니었다.⁶⁹⁾

68) 北旅東谷(이동곡), 「東西의 文化를 批判하여 우리의 文化運動을 論함」 『開闢』 제29호, 1922년 11월.

69) 류시현, 「일제하 최남선의 불교 인식과 ‘조선불교’의 탐구」, 『역사문제연구』 제1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198-201. 물질영역과 정신영역의 정치기획에서 드러나는 문명과 문화개념은 보편과 특수, 국민과 민족 등의 이항대립을 내포

나아가 파산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 조선인의 민족정신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조선은 조선인의 특수성에 존재가 걸려 있다. 그런데 조선인의 특수성은 무엇인가? 조선인은 생존을 목표 삼고 자각한 대로 생사를 결정하여 결론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행하는 성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것이 조선인의 특수성이다. 문학회에서도 그 성질, 실업계에도 그 성질이 삼투되면 조선은 현재 파산의 지위에서 초월할 것이다.”라는⁷⁰⁾ 서사는 매체를 통해 강력한 자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1926년 쇼와 공황과 1929년 세계 대공황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고, 조선인 경제를 구제할 현실적 방법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졌다. 일상생활의 생계 위기가 현실화하자, 파산은 지식인이 담론적 실천을 위해 사용하는 위기의 서사가 아니라 조선인의 경제생활 위기를 알려주는 기표가 되었다.

경제생활의 파탄이 인간성의 상실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매체를 통해 알려졌다. 경제적 파산과 이혼이 자살로 연결되는 “무서운 현실”이 재현되고 있었다.⁷¹⁾ 형의 사업에 투자했다가 파산한 동생이 형과 자신의 처 사이의 불륜을 알고 형과 형수, 조카 2명 그리고 자신의 처를 살해한 사건이 기사화되었다.⁷²⁾ 선천의 일본인 여관 경영자가 파산하자 자신의 집과 몸에 불을 질러 자살한 사건과⁷³⁾ 친정아버지의 파산을 비관하여 음독자살한 어린 며느리의 기사가 신문의 지면을 채웠다.⁷⁴⁾

경제생활의 파탄, 생계의 위기가 인간다움뿐만 아니라 생명을 버리는 상황을 초래하자 지식인들은 조선 민족의 도덕성 회복을

하는 것이었지만, 최남선을 비롯한 당시 지식인들에게는 모순적인 것이 아니었다.

70) 延禧專門學校教授 韓稚觀, 「特殊的 朝鮮인」 『東光』 제8호 1926년 12월.

71) 金東仁, 「女人數題-溫泉雜感」 『三千里』 제6호, 1930년 5월.

72) 『東亞日報』, 1931년 4월 23일자 「친형일가를 살상, 철창에서 발광까지, 파산신청의 원한」.

73) 『東亞日報』, 1931년 11월 14일자 「破産後 差押當고 自家에 放火燒死」.

74) 『東亞日報』, 1933년 5월 24일자 「親家破産悲觀 少婦飲毒自殺」.

주장하고 나섰다. 1933년 경제불황이 끝나갈 무렵 『동아일보』에는 도덕적 권위를 소환한 「권위의 폐허, 정신적 파산의 공포, 최근의 범죄증가에 대하여」라는 글이 게재되었다. “남녀의 도덕, 봉우의 도덕, 이웃의 도덕이 모두 파괴가 되는 경향이 날로 심하여 가고 개인과 개인은 마치 아무 도덕적 결속이 없고 저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하여 난투”하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조선인이 정신적 파산을 하게 된 원인을 분석했다.⁷⁵⁾

첫째, 도덕을 최고의 권위로 믿고, 이 권위에 복종하는 신성한 의무를 기조로 하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해왔던 조선인이 한꺼번에 법 만능, 경찰 만능의 제도 밑에 들어 도덕의 권위 대신에 법률의 권위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도덕적 권위의 상실과 그로 인해 파생된 공동체의 도덕적 결속이 해체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조선은 예로부터 재산이 사회적 지위의 기준이 된 일은 없었는데, 근래에 들어서서는 도덕을 중심으로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회제도의 해독이라는 것이다. 이는 자본주의 물질 만능과 근대 사회의 능력 만능을 원인으로 지적한 것이다.

셋째 도덕적 권위가 실추된 원인은 극단적으로 혼란하게 수용된 신사조들 때문이라는 것이다. 모든 제도와 인습을 반대한다는 슬로건을 내건 사조는 민족의 전통을 정당하게 비판할 틈도 주지 않고, 청년의 혈기로 전통 파괴를 일삼고 있고, 특히 혈기에 넘친 욕망을 제어하는 모든 도덕률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라는 것이다. 이는 1920년 이후 조선에 유입된 새롭고 급진적인 문화적 사조들을 비판한 것이었다.

또한, 이 글에서는 세계 자본주의 사회에서 파시즘이 등장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심의 결과라고 설명

75) 『東亞日報』, 1933년 8월 25일자 「권위의 폐허, 정신적 파산의 공포, 최근의 범죄증가에 대하여」.

했다. 파시즘의 근본정신은 재산 본위를 인격 본위로, 권리 본위를 의무 본위로, 개인 본위를 국민 본위로 바꾸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글에서 파시즘의 정신을 소개하는 것은 “오늘날 사회가 경제기구의 파탄 위기와 동시에 정신의 파탄이라는 위기” 맞고 있고, 이 사실을 각국의 국민이 자각하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결론은 “경제적 파산은 회복할 수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한번 파산된 민족은 민족으로의 생명이 영원히 단절될 것”이라고 하여 민족정신의 회복을 주장했다.

매체를 통해 확인된 경제적 파산이 개인 물질생활의 파탄을 넘어 인간성의 상실이란 결과로 연결된다고 인식된 순간, 민족경제의 발전과 그것이 가져다줄 민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인정 욕망은 총독부에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문법에서 조선인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문법으로 변화되었다. 근대 자본주의를 영위할 개인이 갖추어야 할 경제적 토대의 의미가 민족으로 확장되었던 경로와 같은 양상으로 개인의 도덕성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의 도덕성으로 대체되고, 민족의 도덕성은 민족의 고고학적 기원으로서의 전통의 권위를 강력하게 소환하도록 했다. “개인 본위에서 민족 본위로”, “이욕 본위에서 덕의 본위로”라는 슬로건은 공동체에 의한 개인의 헌신을 의미했다. 그리고 조선인은 “반만년 지켜왔던 도덕 최고의 권위”인 ‘전통의 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공동체의 파탄을 막는 방법이 궁극적으로 전통의 도덕적 권위를 되살리는 것이란 주장은 역으로 민족경제를 구제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사라졌음을 자인하는 것이었다. 민족경제는 상상의 현실적 토대를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5. 나오는 글

19세기 말 한국에서 국민경제학의 상상은 유길준의 『서유견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그는 경쟁 대신 경리를 사용하면서 개인의 이익이 공익 또는 국가의 부로 연결된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신하지 못했다. 그래서 경리를 유교 윤리인 ‘친애자정’을 타인에게 확장하는 것으로 설명했다.

국민경제란 용어는 1905년 이후 매체에 등장했다. 그 의미는 인민의 경제활동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었고, 동시에 독립 국가의 기초로 상상되었다. 일본의 경제적 침탈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민경제를 이끌 주체로 ‘자본가’의 활동과 역할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자본가의 이익 추구가 공익적 목적과 부합하지 않은 경우가 등장했기 때문에 신문 매체에서는 구도덕과 신지식의 조화를 통해 이들이 ‘공익’을 위해 활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일본인에 의해 침탈받는 한국경제에서 ‘자본가’는 민족적 가치를 부과 받았다. 국민경제적 상상이 점차 민족경제적 상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14년~1918년 사이 일본의 경제 호황에 따른 조선경제의 호황으로 인해 민족경제에 대한 상상은 경계가 불분명했다. 일본의 조선 유학생들이 주도했던 『학지광』에는 경제 호황기를 ‘경제전쟁’의 시대로 파악했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선인 자본가의 ‘企業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실렸다. ‘국민경제’의 발전이 민족의 자기 결정권을 증명한다고 보았고, 조선경제는 여전히 조선인에 의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족경제’의 경계는 모호했고, 그 내부의 동질성에 대한 구상은 막연했다.

민족 경제적 상상이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낸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찾아온 불경기와 관련이 있었다. 1920년대 민족주의 정치담론은 일본-조선 경제발전의 연쇄를 끊어내고 민족차별의 내러티브를 전면에 드러내고, 민족공동체 내부를 국민경제적 상상으로 구상했다. 경제발전을 통해 대외적 자기 결정권을 증명하고자 하는 지향은 지속되었지만, 그 지향의 전선은 자본축적의

위기로 인해 수정이 불가피했다. 일본 산업화에 따른 조선인 자본가 그룹 내부의 분화, 노동자와 소작농의 생활상태 악화는 민족 내부에 심각한 균열을 발생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인구, 무역, 산업, 재정 등에 대한 국민경제적 지식과 통계생산방식으로 인해 ‘민족경제’ 내부는 생산증대-소득증대-소비확대-경제발전이 선순환적 관계라는 국민경제적 상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었다.

식민지배가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민족차별에 대한 경험은 조선인이 총독부 정책에 반감을 갖게 하는 것이었고, 그 반감은 총독부의 정책적 효과를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정치기획에 의해 차별의 경험이 공유되면서, 조선인의 반감은 소득증대를 위한 각성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이 민족적 각성은 자본축적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 경쟁시스템의 회복을 위해 시장의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경제주체-경제적 중간층-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은 총독부의 정책적 목표와 동일한 것이었다.

매체를 통해 확인된 파산의 결과가 물질생활의 파국을 넘어 도덕성의 상실이란 현상으로 해석되는 순간 근대 사회를 영위할 주체의 형성을 위해 요구된 지향들이 급속하게 도덕성으로 수렴되는 경로를 밟는다. 개인의 도덕성은 민족의 도덕성으로 확장되고, 민족의 도덕성은 민족의 고고학적 기원으로서의 전통의 권위를 강력하게 소환했다.

참고문헌

- 김윤희, 「1920년대 초 ‘민족경제’와 통계지식-담론적 실천과 효과를 중심으로」, 『역사와 담론』 제80호, 호서사학회, 2016.
- _____, 「근대 국가구성원으로서의 인민개념 형성(1876~1894)-民=赤子와 『西遊見聞』의 인민-」, 『역사문제연구』 제21호, 역사문제연구소, 2009.
- _____, 「파산, 식민지 근대 일상생활의 기표」, 『아시아문화연구』 제19권, 아시아문화연구, 2010.
- _____, 「‘노동(자)’, 그 해석과 배치의 역사」, 『상허학보』 제22권, 상허학회, 2008.
- 마르크스(K), 『경제학-철학 수고』, 김태경 옮김, 이론과 실천, 1987.
- 류시현, 「일제하 최남선의 불교 인식과 ‘조선불교’의 탐구」, 『역사문제연구』 제14호, 역사문제연구소, 2005.
- 小林英夫, 『植民地への企業進出-朝鮮會社令の分析』, 柏書房, 1994.
- 송규진, 「1910년대 관세정책과 수이출입구조」, 『역사문제연구』 제2호, 역사문제연구소, 1997.
- 스미스(A), 『국부론』上,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03.
- _____, 『도덕감정론』, 박세일·민경국 옮김, 비봉출판사, 1996.
- 전우용, 「1910년대 객주통제와 ‘조선회사령」」, 『역사문제연구』 제2호, 역사문제연구소, 1997.
- 정용서, 「일제하 천도교 청년당의 운동노선과 정치사상」, 『『개벽』에 비친 식민지 조선의 얼굴』, 모시는사람들, 2007.

<Abstract>

National Economy and Confucian Morality:
A Genealogical Search for National Economy Discourse

Yun-Hee KIM
(Jeonju Univ.)

Today, the imagination of national economics can be said to have emerged entirely from (neo)classical economics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knowledge to think about capitalism inside the state and the addition of regional or national specificity and social ethics to the history school.

Theref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cess through which this imagination appeared and spread throughout the national economy of Korea. Furthermore, during this process, I would like to examine ho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ucian ethics has been formed.

Key Words: National Economy, Ethnicity, Confucianism, Hwangseong Shinmun, Daehan Mael Shinbo, Hakjikkwang, Dong-A Ilbo, Class

	심사완료일	
논문접수일: 2020.12.27.	1차 심사: 2021.01.02. 2차 심사: 2021.01.02. 3차 심사: 2021.01.02.	게재 확정일: 2021.01.04.